

보도시점 : 2025. 4. 20.(일) 11:00 이후(4. 21.(월) 조간) / 배포 : 2025. 4. 18.(금)

## 전기차 화재 징후 시 소방차 실시간 출동 ... 신속 대응 체계 시범 운영 시작

- 21일부터 소방청 등과 협업, 화재 골든타임 확보 위한 감지·신고 체계 구축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소방청, 한국교통안전공단, 현대차·기아,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4월 21일부터 ‘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’을 시행한다.
  -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·신고 체계를 구축하여,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-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'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'(24.9.6 발표)의 일환으로 현대차·기아,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된다.
  - 대상차량\*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(아이오닉5), 기아차 1만대(EV6), BMW/MINI 2만대(BMW iX, iX1, iX2, iX3, i4, i5, i7 등 7차종, 신형 MINI 쿠퍼,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) 등이 포함되며,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.
  - \* 대상차량은 자동차 ①배터리관리시스템(BMS)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및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, ②차량소유자의 개인·위치정보를 소방관계 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가 필요
-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·충전·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,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.

-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정보(연락처, 차종, 차량번호, 차량위치 등)를 전달하여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, 화재 진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게 된다.
-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보다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‘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\*’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.
  - \* 전기차 화재 신고로 출동 후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매뉴얼로, 소방청 출동 후에도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특수상황 등 다양한 사례를 포함
- 또한,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기차 안전성 국제기준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"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,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 <총괄>	모빌리티자동차국	책임자	과 장 김은정 (044-201-3817)
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심형석 (044-201-3840)
			주무관 이인영 (044-201-3841)
담당 부서	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	책임자	계 장 홍성일 (044-205-7530)
		담당자	담 당 노시환 (044-205-7522)
담당 부서	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안전연구처	책임자	처 장 이명수 (031-369-0301)
		담당자	책임연구원 문보현 (031-369-030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